

형사정책개론 기출 해설

- 임 현

01 형사정책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험연구는 실험 지역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상적 환경에서도 완벽한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하다.
- ②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 ③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태도·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 ④ 추적조사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정답 ②

해설

- ②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인 범죄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므로, 생생한 자료를 얻기 쉽고 그 연구 대상 집단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 ① 실험연구는 연구결과에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인지 여부의 정확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내적 타당성 확보에 유리하다. 다만, 실험 지역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인과관계 검증은 불가능하다.
- ③ 설문조사는 조사과정에서의 조사 대상자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고, 설문의 내용에 따른 인식의 변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 ④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은 실험적 연구방법이다. 추적조사(추행조사)는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범죄자와의 상호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02 사이크스(Sykes)와 마츠(Matza)의 중화기술 중 '비난자의 비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② 사회지도층 역시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행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③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 ④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사회지도층 역시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행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할 사회지도층에 대하여 먼저 비난을 가하는 것이므로 '비난자의 비난'에 해당한다.
- 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는 가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가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 ③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 ④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03 샘슨(Sampson)과 라움(Laub)의 생애과정이론(연령-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행위의 지속성과 가변성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 ②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 행위의 원인으로 본다.
- ③ 성실한 직장생활, 활발한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것을 범죄 중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 ④ 범죄를 중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은 체포 혹은 수감(收監) 경험이다.

정답 ④

해설

- ④ 샘슨(Sampson)과 라움(Laub)은 범죄를 중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4가지 사건으로 결혼, 군 입대, 구직, 자신의 환경과 이웃의 변화를 들고 있다.
- ② 샘슨과 라움의 생애과정이론은 생물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유대이론, 통제이론 및 발달론적 이론의 개념을 통합한 이론이다.

04 「소년법」상 형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 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7.2.14., 96도1241).
- ② 동법 제59조
- ④ 동법 제60조 제4항

0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호장비에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 및 발목보호장비, 보호복이 있다.
- ②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를 지정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원장은 제1항 제7호의 처분[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① 보호장비의 종류에는 i) 수갑, ii) 포승(捕繩), iii) 가스총, iv) 전자충격기, v) 머리보호장비, vi) 보호대(保護帶)가 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복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4조의2 제7항).
- ③ 원장(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즉 소년원장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지, 다른 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06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의를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②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치적 개념으로 본다.
- ③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의 정의는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본다.
- ④ 상호작용론적 관점과 합의론적 관점 모두에 따르면, 법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정답 ④

해설

- ④ 합의론적 관점에서 법률의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공유를 상징하므로 법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범죄자의 행위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것으로, 범죄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지만 사회적 규범의 해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규범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사회적 반응에 따라 범죄자로 낙인찍힐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07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사회계층·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한다고 보았다.
- ②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긴장이론)과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 ③ 범죄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해체지역에서 주로 생겨나며, 폭력과 같은 즉흥적인 범죄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 ④ 도피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의 구성원을 '이중 실패자'로 묘사하기도 하며, 마약 중독 등의 도피적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해체지역에서 주로 생겨나며, 폭력과 같은 즉흥적인 범죄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 것은 '갈등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이다. 범죄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는 범죄의 학습기회와 수행기회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하위문화권의 청소년은 관습적이며 비행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므로 절도·강도 등의 범죄 및 비행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08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등록정보 중 성범죄 전과사실은 죄명과 횡수가 포함된다.
- ②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보안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 ④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 ④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 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즉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장관은 제43조 제5항·제6항(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및 제43조의2 제3항(출입국 시 신고의무)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횡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 ②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고,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12.29., 2015헌바196).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거나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즉 보호관찰관의 승낙과 사회봉사 대상자의 분명한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 ② 동법 제11조
- ③ 동법 제7조 제2항
- ④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10 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양형의 조건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과 범죄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 ② 「형법」은 양형 원칙으로 양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와 비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③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④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해설

- ④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 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i)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ii) 피해자에 대한 관계, iii)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iv)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 형법상 양형의 조건에 ‘범죄 전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형법」에 양형 원칙으로 양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와 비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참고로 「법원조직법」에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설정·변경과 관련하여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 ③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11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건 본인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거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③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조사관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 ④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소년법 제19조 제2항).
- ① 사건 본인이거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동법 제17조 제2항).
- ② 동법 제13조 제1항
- ④ 동법 제10조

12 모피트(Moffitt)의 발달유형론(developmental taxonom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사회적 범죄자를 청소년기한정형(adolescence-limited)과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으로 구분하였다.
- ②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에 비하여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또래 집단과의 유대관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 ③ 개인의 신경심리학적 취약성과 범죄 유발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생애지속형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격차, 즉 성장격차(maturity gap)를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가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정답 ②

해설

- ②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는 성숙의 격차, 사회적 모방 및 강화로 인하여 범죄가 시작되므로 또래 집단과의 유대관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생애지속형 범죄자는 유년기 부적절한 훈육과 신경심리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하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므로 또래 집단과의 유대관계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랑게(Lange)는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적 영향과 입양 부모의 환경적 영향이 상호작용할 때 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② 후튼(Hooton)은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신체적 열등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유형을 제시하였다.
- ③ 크레취머(Kretschmer)는 체형과 성격유형, 범죄 잠재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제이콥스(Jacobs)와 동료들은 수용자 집단의 XYY 염색체 비율이 정상집단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정답 ①

해설

- ① 랑게(Lange)는 쌍생아 연구를 체계화하여 이란성쌍둥이에 비하여 일란성쌍둥이의 범죄일치율이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한 사람이다.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적 영향과 입양 부모의 환경적 영향이 상호작용할 때 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허칭스와 메드닉(Hutchings & Mednick)이다. 허칭스와 메드닉은 생부모와 양부모의 범죄기록을 분석하여 생부모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범죄율이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여기서 생부모의 범죄기록과 양부모의 범죄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생부모만 범죄기록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② 고링(Goring)이 범죄는 신체적 변이형태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유전에 의해 전수된 것이라고 하여 롬브로조(Lombroso)의 이론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후튼(Hooton)은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신체적 열등성을 가지며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유형을 제시하여 롬브로조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 ③ 크레취머(Kretschmer)는 인간의 체형을 투사형, 세장형, 비만형 및 발육전형으로 분류하고, 체형에 따라 성격유형과 범죄유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④ 제이콥스(Jacobs)에 의하면 XYY형은 신장이 크고 공격적·폭력적이며 지능이 낮고 살인과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며 전과자들이 많고 감정이 없으며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③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또는 제40조(긴급구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운전기사 신규 채용 내지 정년 도과 후 축적된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거나, 정년 후 계속 근로를 원하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심이 위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지위, 업무 환경, 생활상태, 기타 개별적·구체적 특성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9.30., 2010도6403).
-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② 동법 제45조
- ④ 동법 제41조 본문

15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 그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형의 집행기간은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③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감호와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정답 ③

해설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제3호

- 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및 제3호(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
- ②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동법 제18조).
- ④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는데,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11., 2014도6930, 2014감도25, 2014전도126, 2014치도3).

더 알아보기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및 제3호(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자: 15년
2. 제2조 제1항 제2호(마약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자: 2년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16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③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 위탁 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 그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4호)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34조 제6항). 보호처분의 기간을 원칙 2년에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이다. 즉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33조 제3항).
- ②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대법원 1994.11.5., 94트10).
- ③ 제3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동법 제33조 제7항).
- ④ 제32조 제1항 제4호(단기보호관찰) 또는 제5호(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동법 제32조의2 제1항).

17 비행 청소년의 처벌과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균형·회복적 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은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다.
- ② 소년법에 대한 형사법원 이송은 전통적인 소년사법 이념인 국친사상에 부합한다.
- ③ 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의료모형에서는 비행 청소년은 자유의지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 ④ 소년사법에 있어서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균형·회복적 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은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준법적인 삶으로의 회복, 범죄로 인해 공동체에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을 통하여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소년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둔다.
- ② 국친사상은 범죄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국가후견사상에 기반을 두고 부모가 없는 소년이나 부모가 소년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소년에 대한 후견인적 역할을 하여 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소년법을 형사법원에 이송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친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의료모형에서 비행 청소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범죄자로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고 본다. 비행 청소년은 자유의지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하는 것은 범죄통제모형이다. 즉 범죄통제모형에서는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만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④ 소년사법에 있어서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소년법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가족,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온건하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소년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절도범죄 및 스토킹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이다.
- ④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단서, 제33조
- 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동법 제4조). 즉 선고는 할 수 있다.
- ②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6항).
- ③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절도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③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 중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수갑·포승·보호대(帶)이며, 가스충이나 전자충격기는 사용할 수 없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제2항).

- ① 동법 제15조 제3호
-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유예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동법 제30조 제2호).
- ④ 동법 제51조 제2항

더 알아보기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제2항)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포승·보호대(帶): 제4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가스총: 제46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전자총격기: 제46조의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보호장구의 사용사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제1항)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큰 때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더 알아보기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갹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더 알아보기

보호관찰의 기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가석방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단기보호관찰) 및 제5호(장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②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때 그 집행이 종료되며,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3호
- ② 전자장치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의6 제2항).
- ③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i)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ii)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iii)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동법 제31조의7).
- ④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의6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에 전자장치의 부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장 등에게 결정문을 송부할 이유가 없다.

더 알아보기

수신자료의 폐기시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